

도마위 오른 선관위 투표용지 관리실태

통합당 민경욱 공개한 투표용지 6장, 경기 구리시서 유출 봉인된 봉투 유출 경로 불분명...선관위, 대검에 수사 의뢰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 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부정 개표 의혹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억지이자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가 분실한 투표용지임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유출 경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공개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추적해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 의원의 주장과 달리 해당 용지는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잔여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 봉인해 개표소로 옮기고, 개표 업무가 끝나면 다시 구·시·군 선관위로 옮겨 봉인 상태로 보관하게 된다.

이번에 사라진 6장의 투표용지를 포함해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들도 투표가 끝난 후 봉인돼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으로 옮겨져 체육관 내 체력 단련실에 임시 보관됐다. 이후 개표 작업 중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불일치하는 점이 확인돼 선관위 직원이 봉인된 봉투를 한 차례 열어 잔여투표용지매수를

확인했다. 이때 문제의 6장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점 이후부터 개표 작업이 끝나 구리시 선관위가 봉인된 봉투를 가져갈 때까지 어떻게 투표용지 6장이 사라졌는지가 불분명한 상태다. 당시 체력단련실 입구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인력 배치도 이뤄지지 않아서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유출된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기표가 완료된 투표지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구 선거구에서 85장이 사라진 적이 있다. 선관위는 이를 결국 찾지 못했고, 투표지분류기에 남아있던 이미지 파일로 기표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계속되는 부정 개표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민 의원은) 인천의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구리 지역의 본 투표용지를 흔든다"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우리 선거관리시스템, 투개표관리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한다"며 "아직도 19세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주원 최고위원도 "투표용지를 탈취한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불법적으로 탈취된 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하는 게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제보 현상금을 걸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새 원내대표 첫 회동

김태년·주호영 임시국회 소집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만간 국회에서 만나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한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김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한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를 찾은 데 대한 답례 의미도 담겼다.

두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되

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고위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해당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는 다음 주에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통합당이 전날 부친상을 마치고 복귀한 주 원내대표의 사정을 들어 난색을 보이면서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비대면 산업 지원 속도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토론회...정책 지원·규제 완화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언택트(비대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도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등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언택트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게 할 것"이라며 "정책·재정·행정

적 지원 및 규제 완화가 모두 필요해 이를 위한 입법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중 하나가 언택트 산업"이라며 "새 산업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제도개선, 규제혁신도 따라가야 한다. 혁신산업은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나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본부장은 규제완화를 21대 국회의 소명이라고 말하고 "규제 혁파 입법을 8월까지 완결하면 확실히 G20(주요 20개국)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에서 이해찬 대표와 당선인들이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구성 협상' 3차 추경 변수 부상

원구성 지연될수록 심사 불가...통합당 "與 통 큰 양보 기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와 맞물릴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내달 초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달 들어 3차 추경안 논의와 원 구성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3차 추경안을 원 구성 협상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동시에 3차 추경안을 서로 유리한 원 구성 결과를 끌어낼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3차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추경안이 평균 40여일 걸리는 원 구성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지난날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는 통계청의 발표를 근거로 3차 추경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3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 3차 추경안 심사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우회 촉구한 셈이다.

민주당은 177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 구성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역시 3차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3차 추경이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앞세워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예산안과 달리 추경안에 법적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통합당은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원 구성에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배려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 아래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3차 추경안이 원 구성 협상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공수처 사무실, 정부 과천청사에 등지

설립준비단, 독립성 논란에 "법무부와 다른 등 사용"

정부가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까지 서울 강북과 서초 등을 포함해 공수처 사무실이 들어설 장소를 찾았으나 최종적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몇 개 층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사용할지 등과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출입 보안과 사무실 규모 등을 두루 살펴 정부과천청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기소할 경우 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도 거리가 멀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인데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준비단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및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준비단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상설조직"이라며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속조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며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